



한국오리협회-오리 사육농가 성명서

**11월 오리농가 사육제한명령 첫 시행
오리업계 큰 피해 불가피
AI 예방위한 정부의 근본적 대책 호소**



대한민국 오리산업을 지켜주십시오!

AI 예방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합니다!

- 오는 11월 오리농가 사육제한명령 첫 시행 앞두고 오리업계 큰 피해 불가피 -

□ 동양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겨울에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올해로 7번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 특히 오리 사육제한과 더불어 국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중인 AI로 인하여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오리에 대한 각종 방역조치로 대한민국 오리농가들의 소득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오리사육농가는 오리의 사육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 대책이고 매년 오리산업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AI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한편, 2018. 5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신설에 따라 중점발역관리지구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육제한명령제도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 미비로 그간 사육제한은 대상 농가의 동시서 정구를 통한 자원사업형태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내용이 다르다.

□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금년도 10. 1일부터 시행령에 따라 이번 겨울철부터는 오리 사육제한명령제도로 정식 법제화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 이에, 한국오리협회와 오리 사육농가는
**사육제한명령제도의 합법시행을 전제로 시정기간
연장기간 동안 오리농장을 방역차입점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정기간 중만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 다시 한번, 한국오리협회와 전국 오리 사육농가는 아래의 요구에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 ▲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육용오리농가의 손실평가액을 향후 법적분쟁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책정!
- ▲ 동양축산식품부장관이 사육제한을 지시하는 농가 외 지자체들의 자원사업형태의 추가적인 사육제한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사육제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 발생하는 부화장과 도축장 피해에 대하여 AI 소독안정자금지원에 반영하여 지원!
-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중점발역관리지구 내 돼지와 동일하게 오리도 폐업지원대상 축종에 포함함으로써 사육일도 완화할 동안 AI의 예방 도모!
- ▲ 사육제한명령제도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시행하되 해당기간 동안 오리농장을 방역차입점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행사업 추진!

(사)한국오리협회 오리 사육농가 일동

농림축산식품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겨울에 전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사육제한을 처음으로 시행한 이후 올해로 7년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오리 사육제한과 더불어 국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중인 AI로 인하여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오리에 대한 각종 방역조치로 대한민국 오리농가들의 소득은 거의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오리사육농가는 오리의 사육을 금지하여 AI를 예방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임시방편 대책이고 매년 오리산업의 피해가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AI의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지난 2018년 5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제5항 신설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육제한명령제도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시행령 조문 미비로 그간 사육제한은 대상 농가의 동의서 징구를 통한 지원사업형태로 실시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내용이 다르다.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가 개정되어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 겨울철부터는 오리 사육제한명령제도로 정식 법제화되어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와 오리 사육농가는 사육제한명령제도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시행하되 해당기간 동안 오리농장을 방역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을 요구 해왔다.

다시 한번, 한국오리협회와 전국 오리 사육농가는 아래의 요구에 정부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 ▶**사육제한명령에 따른 육용오리농가의 손실평가액을 향후 법적분쟁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수준으로 책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육제한을 지시하는 농가 외 지자체들의 지원사업형태의 추가적인 사육제한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육제한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부화장과 도축장 피해에 대하여 AI 소득안정자금지침에 반영하여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돼지와 동일하게 오리도 폐업지원대상 축종에 포함함으로써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AI의 예방 도모!**
- ▶**사육제한명령제도의 종료시점을 정하여 시행하되 해당기간 동안 오리농장을 방역친화형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